
2026년도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

2026. 1.



법 제 처

1. 사업 개요

□ 사업목표

- 법령심사·법령해석·법령정비 등 법제처 업무와 관련된 주요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·연구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법제처의 정부입법 총괄·조정기능 향상에 기여

※ (관련 법령) 「법제처 직제 시행규칙」 제4조제4항,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

□ 사업예산

- 2026년 법제정책연구개발 연구비: 50백만원 (260-02 정책연구비)

□ 추진절차

과제 담당 부서	① 과제선정 (1월 ~ 2월 초)	② 연구수행자 선정 (2월 중)	③ 연구추진 (3월~)	④ 과제종료 (11월 ~ 12월)
	·수요 제출 ·수요조사 실시 ·정책연구심의위 개최·선정 ·과제담당관 지정	·입찰공고 ·제안서평가위 개최 ·연구자 선정 ·과제수행 관리	·계약체결 및 과제 수행 ·과제수행 관리	·정산·검수 ·평가 ·활용점검 ·정책연구심의위 결과 보고

※ 2025년도 법제정책연구개발 연구결과: 2건 수행완료

① 법령해석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

* (소관) 법령해석총괄과, (수행) 한국법제연구원

② 법제분야 ODA 사업의 확장 다양화 전략 및 업무절차 재설계 방안 연구

* (소관) 국가법령정보센터, (수행) 주식회사 아이에스티아이 미래전략연구소

※ [붙임 1]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계획 참고

2. 2026년 사업 추진계획

① 수요조사 (12월)

○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: 3개 과제 신청

* [붙임 2] '26년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참고

** '26년 법제정책연구개발 예산(50백만원) 고려 시 1개 과제 선정이 적절

연번	과제명	부서	내 용	금 액 (백만원)
1	아시아 국가의 법령정보 관리·공개 현황 및 공유·연계 증진방안 연구	법제교류 협력담당관	○ 한국과 아시아 주요 국가(몽골, 태국, 우즈베키스탄 등 포함)의 법령정보 관리체계와 내국민·외국인 대상 법령정보 공개 체계 및 현황 조사 ○ 아시아 주요 국가 간 국민·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법령정보 분야 조사 ○ 아시아 주요 국가 간 법령정보 공유·연계의 신속화 및 확대 방안 연구	50
2	노동·환경·보건 복지·산업 분야 행정규칙 전수 검토를 통한 행정규칙 정비 방안 연구	행정규칙 심사정비팀	○ 노동·환경·보건복지·산업 분야의 행정규칙을 전수 검토하여 상위법령 위반·위임범위 일탈 행정규칙 발굴 및 정비안 마련 ○ 전수 검토 사례 중 민생경제 강화, 국민 부담 완화 등 국정과제·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관련된 기획 정비 과제 발굴	50
3	입법예고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	법제정책 총괄과	○ 입법예고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방안 검토 ○ 인식·실태조사 등에 따른 의견 수렴으로 입법예고 제도 개선방안 도출	50

[2] 과제선정 (2월)

- 2026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최, 과제선정 및 담당관 지정

* '26년 과제선정 시 '25년 정책연구용역 과제 추진결과 및 활용상황 보고

[3] 연구자 선정 (2월)

- 과제담당 부서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구자 선정

[4] 과제연구 (3~10월)

- 계약체결 후 용역추진 과정에서 착수·중간보고 등 용역관리 실시
- 연구용역 완료 후 외부전문가에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시스템에 결과보고서 등 결과 등재

붙임 1

2025년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계획

연 번	연구과제명	공개 여부	활용 구분	활용 결과
1	법령해석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	공개	제도 개선 및 정책 참조	○ 법령해석제도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 추진 - (법령해석제도) AI 활용 확대, 관계기관 의견 수렴 관련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개정 등을 통한 신속한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 - (위원회 운영 제도) 위원회 가중의결 요건 완화, 분야별 전문가 확대 등 위원회 운영 개선
2	법제분야 ODA 사업의 확장 다양화 전략 및 업무절차 재설계 방안 연구	공개	정책 참조	○ 법제 ODA 사업의 지속성 및 실효성 등 제고를 위한 전략 및 사업 운영 체계 개선 등에 활용 - ODA 신규 사업 모델 발굴, CALI 등 다자 협의체 적극 활용, ODA 사업 추진 체계 정립 및 ODA 사후관리 전략 수립 등

붙임 2

2026년 정책연구용역 과제 신청서

신청 과제 1

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

과제명	아시아 국가의 법령정보 관리·공개 현황 및 공유·연계 증진방안 연구		
신청부서	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	담당공무원	이원준 사무관
연구방식	[☒] 위탁형 [☐] 공동연구형 [☐] 자문형		
연구기간	' 26.3 ~ ' 26.10 (8개월)		
예산항목	[☒] 포괄 연구개발비 [☐] 사업별 연구개발비		
예산금액	50백만원		
계약방법	협상에 의한 계약(제한경쟁입찰)		
연구 필요성	아시아 국가간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적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규제·지원하는 각 국가의 법령정보가 체계적으로 취합되고 다른 국가에도 공유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, 아시아 주요 국가별 법령정보 관리·공개 체계 현황과 국가간 연계 증진방안을 연구함으로써, 아시아 각국의 기업 및 국민들에게 다양한 국가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.		
연구의 유사·중복 검토 결과	중복검토 방법: 정책연구관리(PRISM) 내 정책연구과제 정보 비교·분석 유사·중복 여부: [☐] 있다 [☒] 없다 ※ 유사·중복되는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		
국민 의견 수렴 여부	[☐] 수렴 [☒] 미수렴 ※ 국민생각함 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		
연구내용	○ 한국과 아시아 주요 국가(몽골, 태국, 우즈베키스탄 등 포함)의 법령정보 관리체계와 내국민·외국인 대상 법령정보 공개 체계 및 현황 조사 ○ 아시아 주요 국가 간 국민·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법령정보 분야 조사 ○ 아시아 주요 국가 간 법령정보 공유·연계의 신속화 및 확대 방안 연구		
연구결과 활용방안	○ 법제처 사업(국가법령정보센터, 세계법제정보센터 등)의 개선방안 검토 ○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* 내 결과 공유 및 각 국가별 법령정보정책 개선 유도 * 아시아 각 국의 법제기관간 상시적 협의기구(한국, 몽골, 태국, 우즈베키스탄 가입 중)		

신청 과제 2

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

과제명	노동·환경·보건복지·산업 분야 행정규칙 전수 검토를 통한 행정규칙 정비 방안 연구		
신청부서	법제처 행정규칙심사정비팀	담당공무원	양진나 사무관
연구방식	☒ 위탁형 ☐ 공동연구형 ☐ 자문형		
연구기간	' 26.4 ~ ' 26.10 (7개월)		
예산항목	☒ 포괄 연구개발비 ☐ 사업별 연구개발비		
예산금액	50백만원		
계약방법	협상에 의한 계약(제한경쟁입찰)		
연구 필요성	발령 후 운영 중인 행정규칙의 합리성·적법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행정규칙 정비 필요		
연구의 유사·중복 검토 결과	중복검토 방법: 정책연구관리(PRISM) 내 정책연구과제 정보 비교·분석 유사·중복 여부: ☐ 있다 ☒ 없다 ※ 유사·중복되는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		
국민 의견 수렴 여부	☐ 수렴 ☒ 미수렴 ※ 국민생각함 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		
연구내용	○ 노동·환경·보건복지·산업 분야의 행정규칙을 전수 검토하여 상위법령 위반·위임범위 이탈 행정규칙 발굴 및 정비안 마련 ○ 전수 검토 사례 중 민생경제 강화, 국민 부담 완화 등 국정과제·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관련된 기획 정비 과제 발굴		
연구결과 활용방안	행정규칙 정비 추진		

신청 과제 3

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

과제명	입법예고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		
신청부서	법제정책총괄과	담당공무원	전혜정 서기관 전준수 주무관
연구방식	[☒] 위탁형 [☐] 공동연구형 [☐] 자문형		
연구기간	2026. 4. ~ 2026. 10. (6개월)		
예산항목	[☒] 포괄 연구개발비 [☐] 사업별 연구개발비		
예산금액	50백만원		
계약방법	협상에 의한 계약(제한경쟁입찰)		
연구 필요성	국민의 입법과정 참여 보장을 위해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제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		
연구의 유사·중복 검토 결과	중복검토 방법: 정책연구시스템(PRISM) 등 확인 유사·중복 여부: [☐] 있다 [☒] 없다 ※ 유사·중복되는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		
국민 의견 수렴 여부	[☐] 수렴 [☒] 미수렴 ※ 연구용역 기간 중 국민인식조사 실시 예정		
연구내용	○ 입법예고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방안 검토 ○ 인식·실태조사 등에 따른 의견 수렴으로 입법예고 제도 개선방안 도출		
연구결과 활용방안	향후 법령 개정 및 제도 운영에 활용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